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6년 5월 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성평등가족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힘.

-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3년간 관계성 범죄 신고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2025년 대비
계	339,804	356,988	439,382	23.1% ↑
가정폭력	230,830	236,647	289,368	22.3% ↑
교제폭력	77,150	88,394	105,327	19.2% ↑
스토킹	31,824	31,947	44,687	39.9% ↑

-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가 서로 매칭되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관계성 범죄 신고 〉



참고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5.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81

성평등가족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핵심 국정성과 보고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26.5.20.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 강화
 - * 예산 : (‘25)45.5억 원→(‘26)76.2억 원 67.5% ↑ / 지원실적:(‘24) 35.7만건→(‘25) 38.1만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감지 | 차단 | 대응

- AI 기반 24시간 자동 탐지·신고
- 불법 촬영물 유통경로 분석, 반복 게시 사이트 분석

감지 | 차단 | 대응

-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
- 위급 중대피해 직접 대응

감지 | 차단 | 대응

- 불법 유포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 범죄수익 몰수, 형사처벌
- 국제수사 공조

-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전면 개편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5. 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91

성평등가족부,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5월 2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5. 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95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tate/mooringBillPage.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저출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 5. 1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 강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6. 5. 13.	•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 제공
여성고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2026. 5. 11.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2026. 5. 20.	•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안 제11조의7제1항)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2026. 5. 21.	연합뉴스	[세상풍경] '육아는 엄마 몫?'... 세상이 바뀌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1023400546?input=1195m
	2026. 5. 18.	세계일보	애는 집에서 엄마가 봐야? 놀!... 18년 만에 '반대 > 찬성' 역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18514974?OutUrl=naver

•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2026. 5. 18.	EBS	'강남역 10년' 여전한 불안... 달라진 여성 정책 과제는?	김종숙 원장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725143/N
2026. 5. 15.	이데일리	"집에 가는 길 무섭지 않게"... 시로 실시간 안전경로 알려준다	김효정 부연구위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77926645449248&mediaCodeNo=257
2026. 5. 17.	한국일보	여성 겨누 범죄 '순찰 강화' 만으로 못 막는다... 강남역 10주기, 남은 숙제들	김효정 부연구위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110900004813?did=NA
2026. 5. 17.	한국일보	"10년 전 화장실과 뭐가 다른가"... 두려움은 커지고 처벌은 여전히 약했다	김효정 부연구위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1210020005213?did=NA
2026. 5. 17.	경향신문	죽음 위에 세운 법, 법원선 낮은 인용률... "정치권·경찰·법조계 성평등 인식 부족"	홍미리 부연구위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72119005
2026. 5. 18.	경향신문	'여성의 죽음'으로 고쳐온 법조문... "구조적 성차별" 본질조차 이해 못해	홍미리 부연구위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81602001
2026. 5. 18.	한겨레	"TV도 안 들려" 발전소 언니 말대로 보청기... '내 일' 불안한 이층의 소외	강민정 연구위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9114.html